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46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손명수 · 염태영 · 백혜련
한준호 · 이기현 · 김영환
부승찬 · 이상식 · 김준혁
권칠승 · 송옥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2. “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도의 책무) ① 국가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등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특례시의 특례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3. 제10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
4. 제10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5. 그 밖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특별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특별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

1. 특별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특별부여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 특례) 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3.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2항 제1호,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체 요청 등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6.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 조사·측량, 조성계획의 승인·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 등에 관한 협의 및 준공검사 등
7.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8.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
9.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 제7조의8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의9,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실적 제출,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지정해제 요청,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부담 협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등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 등록증 반납,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수수료 수납,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

발·운영 등

13.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
14. 「물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등의 명령
1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1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
18.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
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승인취

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사용약관 신고 및 시설 사용료 인가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 및 강화

23.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환수·반환 등

24. 「주택법」 제20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25.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

27.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

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29. 「하천법」 제8조 및 제8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 및 폐천부지등의 관리

30.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

3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

제10조(영향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례시와 도 및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례시에 대한 지원) 국가 및 도는 특례시가 제9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특례부여 요청 등) ① 특례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여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도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